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학교교육 | 의정토론회 |

2020. 12. 23(수) 15:00~17:00

충청남도의회 112호



충청남도의회
CHUNGCHEONGNAM-DO COUNCIL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학교교육 | 의정토론회 |

2020. 12. 23(수) 15:00~17:00

충청남도의회 112호



충청남도의회
CHUNGCHONGNAM-DO COUNCIL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학교교육 의정토론회 개최 계획

토론회 개요

일 시	2020. 12. 23(수) 15:00 ~ 17:00
장 소	충청남도의회 112호
주 최	충청남도의회(신청 : 기경위 이선영 의원)
주 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학교교육의 정책방향 등 토론
참석예정	20여 명(도민,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

진행 흐름

시 간	내 용	비 고
〈 개 회 식 〉		
15:00~15:05	05'	개회 및 국민의례 등
15:05~15:10	05'	인사말씀, 내빈소개 등
〈 토 론 회 〉		
※ 진행 : 이선영 의원		
15:10~15:30	20'	주 제 발 표
15:30~16:10	40'	지 정 토 론
16:10~16:30	20'	자 유 토 론
16:30~16:55	25'	청 중 토 론
16:55~17:00	05'	정리 및 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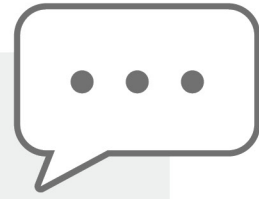
C O N T E N T S

| 주제발표

- 코로나 19와 학교 7
- 진보교육연구소 소장 천보선

| 지정토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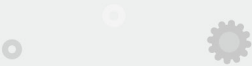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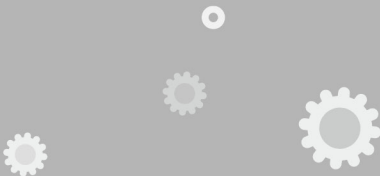
1. 미래 세대를 준비하는 학교 방역은 사회 방역과 달라야 한다 19
- 논산공업고등학교 교사 김종림
2. 코로나19와 교육급식 25
- 은진초등학교 교사 이 영
3. 코로나 19 초등돌봄의 문제점과 대안 33
- 천안차암초등학교 교사 고차원
4. 코로나19 이후 교육지원 체계 39
- 충남교육청 교육혁신과 장학사 남기윤



주 제 발 표

코로나 19와 학교

진보교육연구소 소장 천 보 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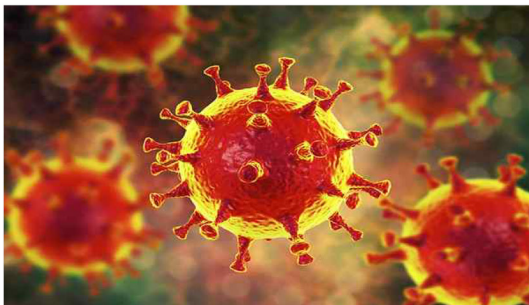
< 코로나 19와 학교 >

진보교육연구소 천보선

* 팬데믹과 교육 충격

코로나 팬데믹 사태는 학교교육에도 커다란 충격을 주면서 그에 대한 대응과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대응 및 변화에 대한 요청은 두 측면에서 제기된다. 우선은 아직 진행 중인 ‘팬데믹 상황에서 학교교육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코로나 사태 종식 이후 또 학교는 어떻게 거듭나야 할 것인가’의 것이다. 지금까지 진행된 모습을 보면 모든 교육주체들이 나름 노력하고 있지만 처음 맞이하는 사태에 대한 대응에 있어 문제점과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또한 기존의 학교가 안고 있는 근본적 문제들도 나타나고 있어 새로운 대응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팬데믹 시기를 겪고 대응하는 과정은 코로나 이후 학교가 어떻게 변화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와도 내용적, 실천적으로 연결된다. 그런 차원에서 팬데믹 상황 속에서 드러난 문제들과 팬데믹 시기 및 이후 학교교육이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의 문제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

1. 팬데믹 상황 속에서 학교가 맞닥뜨린 문제와 과제들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학교는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을 맞이하였다. 주요한 것들을 꼽아본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안전한 학교의 문제

팬데믹 사태 속에서 학교가 폐쇄되거나 학교를 열더라도 번갈아 등교를 하는 상황들이 빚어졌다.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 많은 문제들이 발생한다. 교육 결손과 공백이라는 근본적인 교육 문제는 물론이려니와 학생들의 사회적 접촉과 활동, 돌봄과 안전망 문제. 그로 인한 학부모들의 부담 증가까지 나타난다.

물론 감염 확산 우려 때문에 불가피하게 학교를 닫아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학교가 감염병에 가장 취약한 공간, 환경임이 드러났고 그로 인해 다른 사회조직, 공간보다 더 많이, 더 빨리, 더 자주 닫거나 제한을 둘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있다. 일반 기업은 물론이고 학원과 학교를 비교해도 이 점은 쉽게 드러난다.

학교가 감염병에 취약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분명하다. 과밀학급, 거대학교로 3월에 취약하기 때문이다(이 점에 있어 팬데믹 상황에서 도시의 많은 학교들이 닫거나 번갈아 등교를 할 때 대면 교육을 지속할 수 있었던 ‘작은 학교’의 강점이 나타나기도 함). 시간과 공간의 문제도 있다(등교개학을 준비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리적 거리 확보 및 이를 통제하기 어려운 많은 학생 수 문제 + 학교에서 장시간 머무르게 만드는 교육과정 + 식당 공간 역시 인원에 비해 협소).

교육 결손과 공백이 아이들의 생애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사회조직, 공간보다 더 안전해야 할 학교가 정반대인 상황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이는 ‘안전한 학교’가 향후 매우 중요한 교육적 과제로 제기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 교육 결손/격차의 문제

학교 휴교 및 원격 학습으로 인해 발생한 가장 중요한 교육적 문제는 광범한 교육 결손/격차의 문제이다.

* “61%의 학생은 원격수업이 등교수업 때보다 집중이 안 된다고 답했고, 59%는 원격수업을 잘 받으려면, 사교육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종합하면, 비상 상황에서의 ‘임시방편’으로는 원격수업이 괜찮지만, 일상적인 교육과정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기에는, 아직 충분한 신뢰를 못 받고 있다는 건데요.”(‘낯은 제도·불평등..원격수업 남은 숙제’, EBS 저녁뉴스, 2020. 5.18)

* 53.1% 공부 시간 늘었지만 성적은 떨어져/상위권은 그대로지만 “한 반 절반이 50점 밑”(경기도교육연구원 7월 설문 조사)

* “불안을 느낀 학부모들이 직접 혹은 사교육의 힘을 빌려 자녀의 학습 관리에 더 열정을 쏟으면서 학생들의 학업 부담은 더 늘었다.”(‘코로나19와 교육: 경기도 교육원 학교 구성원의 생활과 인식을 중심으로’ 보고서)

* ‘코로나 학습 격차, 중위권이 없다’(한겨레21 9월) 기사 중

“한 반의 절반에 가까운 아이들이 50점 밑이다.”(경기도 중학교 사회 교사) “70~80점대가 없다. 중위권이 무너졌다.”(제주 중학교 수학 교사) “상·중·하 학생 비율이 1:5:4에서 1:3:6이 됐다. 하향 평준화다.”(제주 중학교 사회 교사) “날말을 쓰고 읽는 과정에서 원래도 학습 격차는 있었지만 올해는 더 심각해졌다.”(서울 초1 담임교사)

이 문제는 비단 한국만이 아니라 코로나 사태 속에서 원격 수업을 실시한 모든 나라에서 나타나는 세계 보편적 문제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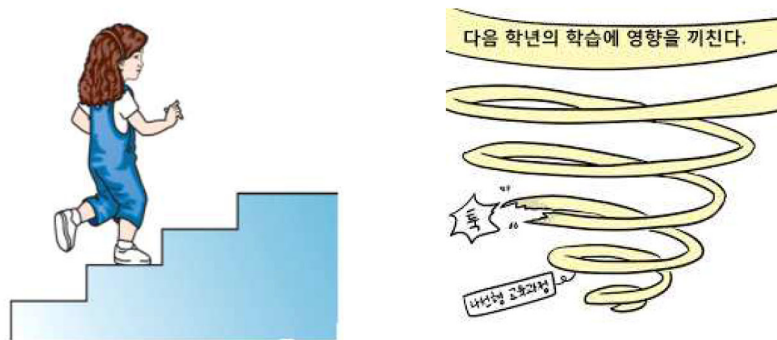
* “집에서 혼자 하는 온라인수업이 교실수업보다 집중력과 학습효과가 떨어지고, 경제력이나 지식정보 취약계층일수록 불리하다는 정황은 지난 몇 달간 전세계가 공통으로 경험하고 있다. 5월 미국 브루킹스연구소는 ... 2020년엔 전국적인 학교 폐쇄가 단행된 3월부터 학업성취도가 급격히 하향으로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소는 “‘코로나19 슬라이드(하락)’로 명명한 이런 결과

는 몹시 우려스럽다”며 “온라인 강의와 홈스쿨링에 따른 학습 손실이 과대평가됐기를 바라지만 실제로는 (그로 인해)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잃을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짚었다.(‘외국에선 “결석이 바이러스보다 해롭다”’, 한겨레21, 2020.09.13.)

* “WSJ는 “원격수업은 실패했으며 작동하지 않았다”며 “부잣집 아이들은 과외를 받거나 비싼 사립학교로 전학할 수 있다. 가장 취약한 계층의 아이들만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비판(서울경제.2020.6.27.)“

“장미셀 블랑케르/프랑스 교육장관 (현지시간 12일) :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원격수업으로는 모든 게 채워지지 않습니다.”(JTBC뉴스. 2020.5.19.)

코로나 사태 속 휴교/원격 학습으로 인한 교육 결손/격차 문제는 코로나 이후 더 부각될 매우 중대한 문제이다. 발달, 교육과정 차원에서 일정 기간의 결손, 공백은 해당 시기에 한정된 문제에 그치지 않고 이후 발달, 교육과정 수행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나아가 생애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이다. 이에 대한 교육적 고려, 대응이 요청된다.



● 경직된 교육과정/학사일정/학교운영의 문제

팬데믹 사태 속 휴교 및 원격수업으로 인한 대면 수업 일수 감소, 대면 교육 활동의 어려움 등의 조건은 교육과정 운영에서 기존의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비상적 상황에서 교육과정 및 학교/학사 일정을 축소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했다. 그러나 비상 상황에서도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교육과정 (시수, 일수, 영역과 내용을 포함하는)에서 추려내지 않은 채 온라인 수업으로 정규교육 과정을 대체하였고 이는 교육적 실효보다 교육과정 이수, 학사일정 진행의 알리바이 만들기에 불과했다. 이는 결국 진급과 진학을 위한 평가와 생기부 빈 칸 채우는 형식적 과정으로 귀결될 뿐이었다.

이는 수업일수, 수업일수, 학기 시작일과 종료일, 학생부 기록 사항 등을 비상적 상황과 무관하게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경직된 교육행정 시스템 때문이었다. 지역별, 급별, 학교별 다양한 조건과 무관하게 모든 것을 교육부에서 결정, 발표하고 학교는 공문대로 시행방안을 만드는 방식이 내내 반복되었고 교육부와 교육청이 결정을 독점하였다. 학교의 자율성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는 운영시스템에서 입시의 ‘공정성’ 문제와

생기부 자료 마련이라는 형식을 갖추기 위해 학교는 상황에 맞는 매뉴얼을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없었다. 팬데믹 상황은 지역/학교의 자율성과 탄력적 운영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새롭게 제기하는 과정이었다.

● 과도한 부담과 업무의 문제

팬데믹 상황은 ‘학교 보건’ 등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와 사회적으로 증대된 돌봄 요구 등 업무의 증대를 가져 왔다. 이러한 업무와 부담 증대는 기존에 안고 있던 문제들을 새롭게 부각시켰다.

첫째, 팬데믹 상황에서 요청되는 보건, 안전 업무는 기존의 시스템에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것이었다. 그렇지 않아도 부족했던 학교 보건, 안전 역량을 새로운 차원에서 확충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둘째, 사회적 돌봄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교육과 돌봄은 연관되긴 하지만 구분되는 일이다. 기존의 학교 돌봄은 본래 학교의 일이 아님에도 편의적으로 학교에 떠 맡기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다. 팬데믹 상황에서 돌봄의 요구는 더욱 증대된 반면 학교가 기존의 방식으로 떠 맡는 것은 어려운 차원의 일임이 드러났다. 이전 시대 대가족 체제와 마을이 안고 있던 돌봄 기능이 변화되는 사회적 조건에서 학교를 넘어 전사회적 차원의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나가야 과제가 제기된다.

셋째, 학교 구성원의 정규직화 필요성이다. 이번 팬데믹 사태 속에서 비정규직 학교 노동자와 정규직 교사, 교직원들이 학생들의 안전 및 학습 관리를 함께 나누기는 어려웠다. 정작 인력이 많이 필요한 비상시기에 대처할 수 없는 고용 구조임이 드러난 것이다. 스포츠클럽, 자유학기, 방과후 교육, 수준별 수업 등 비정상적 교육과정 정책에서 발생하는 비정규인력이 많은 것이 현재 학교의 현실이다. 코로나19와 같은 비상 상황은 물론 평상시에도 학교의 안전성의 측면에서 적정한 인적 구성과 고용형태가 아니다. 아이들을 충분히 보호하고 지도할 수 있는 정규직 인력의 확충이 곧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물론 학교폭력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지속되는 팬데믹 상황

● 팬데믹 언제까지?

팬데믹은 아직 진행 중이다. 이제 백신이 개발되었다고는 하지만 국내에서 광범위한 대중적 접종이 이루어지려면 아직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다. 많은 물량이 공급되기 까지에는 시일이 걸리며, 안전성 확인도 필요하다고 한다. 이에 따라 의료진과 취약계층 등을 먼저 접종하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감염병 분야에서는 내년 상반기말이나 하반기가 되어야 국내에서 대중적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당분간 코로나 팬데믹 사태는 지속될 전망이다. 적어도 내년 1학기는 여전히 팬데믹의 영향 아래 놓일 것으로 보인다. 이후 팬데믹 상황이 언제 종식될 지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내년 상반기부터 백신 접종이 필수 인원부터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여름을 경과하면서 감염 확산 속도가 다소 더뎠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경우 하반기부터는 차츰 안정화되어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전반적으로 내년 봄 이후로 확산세는 둔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팬데믹 상황은 당분간 지속되는 양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학교의 경우도 내년에는 올해 확산세가 다소 둔화되었던 5~10월 시기 상황과 비슷한 조건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1) 시급한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

내년에 확산세가 둔화되더라도 당분간 학교는 2020년 중반부와 같이 ‘학교밀집도’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학교밀집도를 제한하기 위해 번갈아 등교를 할 경우 교수-학습의 파행화, 교육 결손과 격차 확대는 불가피하다. 최대한 대면 교육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밀집도를 줄이면서도 대면 교육을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은 분반 등과 같은 방식으로 ‘학습 집단 규모’를 줄이면서, 그에 따라 더 요구되는 교수 인력을 늘이는 것이다. 2020년 하반기 교육부는 ‘대면 교육이 필요하다’는 교육현장의 요구가 빗발치자 ‘학교 사정에 따라 분반 및 오전/오후반 운영 가능’ 방침을 내놓긴 했으나 교수 인력 확충없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교수 인력 확충 문제는 팬데믹 상황에서 최대한 안전한 대면 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일 뿐 아니라, 차제에 학급당 학생수를 줄여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이기도 하다. 따라서 단지 팬데믹 시기에 한정되는 일시적 대응이 아니라 교육 환경 개선의 기본 방향 차원에서 추진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교수 인력 외 보건, 안전 관리 등 팬데믹 상황에서 요청되는 인력 확충 요구도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안전한 학교’ 구축이라는 기본적 방향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2) 2020학년도 교육 결손에 대한 교육적 처방

2020년 교육 파행은 심각한 교육적 결손과 격차를 야기하고 있다. 차기 학년도 교육 과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교육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매우 비교육적인 일이 될 것이다. 대면 수업을 최대화하는 가운데 우선적으로 발달 및 교육 상황에 대한 진단과 그 진단에 기초한 교육과정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통해 이전 교육과정에서 도달했어야 할 필수적이고 핵심적으로 부분을 확인하고 어느 정도 도달한 상황에서 다음 교육과정 수행으로 넘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할 경우 2021학년도 교육과정도 재구성되어야 되어야 한다. 발달과 교육과정의 연속성이라는 차원에서 탄력적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3) 탄력적 교육과정/학교운영이 필요하다.

2020년 코로나 사태 속에 진행된 학교 운영의 근본적 문제는 상황은 비상적 상황인데 학교와 교육과정 운영은 평소에 하던 것을 다 하려는 방식으로 진행했다는 점에 있다. 생활기록부에 있는 모든 항목을 다 기재하려다 보니 대부분이 형식적으로 처리되고 제일 중요한 ‘교수-학습’은 온라인으로 배우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렇게 학교교육과정을 기계적으로 운영하게 된 데는 어떻게 해서든 입시자료를 산출해야 하는 입시교육이 자리하고 있기도 하다. 팬데믹 상황에서 해 오던 모든 것을 다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해서 가장 중요한 것마저 방기하거나 포기해선 안된다. 2020년 학교교육은 교육의 ‘본질과 핵심’을 희생하면서 ‘형식과 입시자료’를 건지려는 과정이었다. 모든 것을 다할 수 없다면 그 반대가 되어야 한다. 생기부 항목과 입시자료가 아니라 발달의 관점에서 교육적 핵심과제를 이루는 것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2020년의 과정을 거울삼아 교육적 본질에 보다 충실하면서도 안전한 대응이 요청된다.

팬데믹 시기 학교교육의 임무가 2020년과 같이 형식적 과제들을 기계적으로 완수하는데 있어서는 안된다. 팬데믹 시기 학교교육의 임무는 해당 학기/학년 ‘교육과정의 기본 또는 핵심 목표’에 초점을 맞춰 그것을 이루는데 두어져야 한다. 과제 및 목표 설정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내용적 중요성과 교육과정 수행의 연속성 확보’에 두어진다. 교육과정의 기본/핵심 목표는 학년, 학기, 교과별로 연계되어 있다. 때문에 교과 및 활동에서 기본/핵심 목표가 제대로 달성되지 않는다면 다음 학기, 다음 학년 교육과정 수행이 매우 어려워진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일과적인 것, 양적으로 부족한 것은 나중에 채울 수 있지만 교육과정 연계의 기초가 되는 핵심적 내용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두고두고 문제가 된다. 팬데믹 시기 학교교육은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을 추리고 보전하는 과정이고 교육의 연속성을 확보하는데 시간과 노력을 집중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업일수와 수업시수/교육 활동 및 평가 등 교육과정과 학사일정 운영이 탄력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단위 학교 자율성이 요청된다. 팬데믹 상황에 대응하는 비상적 교육과정/학교운영이 필요하며 진정한 ‘교육적 유연성과 창조성’이 요구된다고 생각된다.

3. 코로나19 이후 교육

1) 변화의 불가피성

교육 변화의 필요성은 코로나 이전부터 있어 왔다. 코로나19 사태는 새로운 교육적 과제를 제기하는 한편 변화의 조건들을 확대함으로써 이후 커다란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시대에 뒤떨어진 기존의 입시교육체제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 속에서 '지금의 입시체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지속 가능성'의 한계까지 보이고 있다. 또한 코로나 사태는 감염병에 매우 취약한 학교현실을 드러냄으로써 '안전한 학교' 체제 구축이라는 과제를 새롭게 제기한다. 한편 온라인 수업 경험은 대면 교육의 가치와 의의를 확인하는 동시에 디지털 기술의 교육적 활용 가능성을 높였다. 대면 교육의 중심성을 지키면서 디지털 기술 활용으로 교육 활동 전체를 더 풍부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과제이다. 또한, 사회 전체 차원에서도 코로나 이후 커다란 변화와 새로운 과제들이 제기되는데, 이와 접목할 필요성이 있다. 다양한 측면에서 교육 변화의 불가피성,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변화의 방향이다. 이미 변화 방향을 둘러싼 대립과 쟁점이 형성되기 시작하고 있다. 가장 주요한 대립은 '입시냐/발달이냐'와 '경제적 효율/교육의 질 개선이냐', '원격/대면 교육' 문제라 생각된다.

2) 안전한 학교, 질 높은 교육

코로나 사태는 감염병 사태에 취약한 학교 환경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여러 사회조직 중 학교는 가장 취약한 공간 중의 하나였고 이 때문에 학교는 다른 사회조직들보다 더 늦게 열어야 했으며 등교 개학 이후로도 1주일에 하루, 격주 간격 등으로 번갈아 등교를 해야 했다. 이 같은 경험은 학교를 가장 안전한 곳으로 만들어야 앞으로 감염병 사태가 재발하더라도 교육활동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각인시켰다. 안전한 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학습집단 규모의 축소가 필요하다. '과밀학급', '거대학교'는 이전에 비해 완화되었지만 '안전한 교육'의 조건에는 매우 미흡하다. 영국의 경우 코로나 시기 학급당 규모 15명 이하로 운영하는 지침을 내리기도 했다. 한국의 경우도 교실 크기에 비추어 볼 때 학급 규모를 15명 이하로 할 경우 어느 정도 거리 두기가 가능한 것으로 생각된다.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어도 앞으로 감염병 사태가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다는 경고에 비추어 볼 때 최대한 감염병 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조건을 상시적 교육 조건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급당 학생수와 학교규모의 문제는 안전의 문제일 뿐 아니라 그 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질 높은 교육의 조건이기도 하다. 교사는 집단 속에서 개별 교육을 결합하는 것이 용이해 지고 상호작용의 폭도 넓어질 수 있다. 이 기회에 위생의 문제에서 안전한 학교로의 변모만이 아니라 교육적 관계에서도 긍정적 변화를 유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학교의 공동체성 강화 문제도 제기된다. 코로나19와 같은 비상상황은 물론 평상시 학교의 안전성의 측면에서도 학교를 구성하는 노동자 전반의 정규직화가 필요하다.

이처럼 보다 나은 교육과 사회를 위해 제기되어 온 교육환경 개선, 노동권 강화 과제가 안전한 학교 구축을 위한 과제와 다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출생률 저하로 인한 인구 지형변화는 교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저출생 추

세 속에서 조금만 교사를 더 확충하고 고용구조를 개선해 나간다면 충분히 학급당 인원수를 감축하고 작은 학교를 지향하면서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3) 입시 교육에서 발달 교육으로

(1) 입시 교육의 왜곡된 힘과 한계를 확인했다.

감염병 사태에도 유연한 조정과 대처가 불가능했던 핵심 원인은 입시였다. 이 와중에 생기부에 기록할 평가 자료를 산출하기 위해 억지로 여러 가지를 형식적으로 진행했다. 팬데믹으로 인한 학교교육의 공백기에도 사교육시장은 활발히 돌아갔으며 계층간의 사교육 격차는 이전보다 더 벌어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동안의 양극화와는 다른 차원의 교육양극화 구조가 만들어질 위험성을 확인했다. 한편 코로나 상황 속에서 산출되는 입시자료는 정당성이 의문시되고 있으며 수능도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래저래 기존의 입시체제는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대학서열구조 폐기와 입시 폐지와 함께 교육평가 자체를 바꾸어야 한다. 물론 학교 내 평가는 입시변화 없이는 불가능하다. 절대평가로의 전환, 일제식 정기고사 폐지, 교사별 평가체제 정립으로 나아가야 한다.

(2) 모든 아동, 청소년의 전면적 발달을 도모하는 공교육의 확립으로

입시체제를 해체하는 과정은 모든 아동, 청소년의 전면적 발달을 도모하는 ‘발달 중심 교육’을 정립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발달 중심 교육은 학교의 핵심 기능이 상급학교 선발과 경쟁에 의한 사회적 지위 부여가 아니라 이 사회의 주체가 되는 구성원들의 전면적 발달을 돕고 지원하는 것이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발달 중심 교육은 교육적 본질과 기능을 재정립하는 문제일 뿐 아니라 사회변화에 따른 시대적 요청과도 맞닿아 있다. 첫째, 저출생/고령화 시대는 모든 개개인의 가치가 소중한 사회가 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경쟁과 선발을 통해 일부를 취하고 나머지는 낙오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최대한 모든 구성원의 잠재적 능력을 키우는 것이 사회적 역량을 최대화하는 교육체제여야 한다. 또한 생애 길이가 확장되는 상황에서 교육연한 또한 확대되고 생애교육의 차원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이미 대중화된 대학교육을 공교육의 범주로 확장할 필요가 있고 생애 내내 교육기회를 가질 수 있는 시스템 구축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본다. 둘째, 인지자동화 시대는 정보와 기술의 빠른 변화를 의미하여 이러한 변화에 주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 유연하며 창조적인 역량을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 학교교육이 보편적 발달 과제를 더욱 충실하게 실현할 수 있어야 하며 발달 중심 교육은 이러한 시대 변화와도 결합된다. 셋째, 코로나 사태는 생태, 안전, 평화, 연대의 가치와 과제를 새롭게 강화시키고 있다. 발달 중심 교육은 이러한 시대적 가치와 과제와 결합하면서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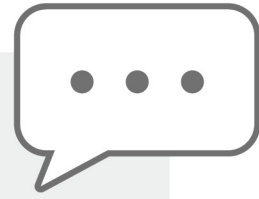
4) 더하여

* 원격학습 기술과 교육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인지자동화 기술 도입의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폭도 넓어질 것이다. 인지자동화와 같은 새로운 기술이 만들어지고 퍼져나가는 시대에 교육의 역할과 새로운 기술의 교육에서의 위치와 활용에 대해 방향 정립이 필요하다. 인지자동화 기술까지 가지 않더라도 온라인 수업과정에서 많은 교사들은 여러 기술과 온라인 비대면 접촉을 경험하였고 이후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어도 일부에 대해서는 활용 가능성이 확대될 것이라 생각된다. 중요한 것은 교육의 대면적 본질과 가치는 지켜져야 한다는 점이다. 원격 기술이 교육을 더욱 풍부하게 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것인지 아니면 교육적 본질을 훼손하면서 학교교육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 될지를 가르는 기준은 ‘교과교육의 공식적 이수 수단’ 여부에 있다고 생각된다. 원격 기술이 지금까지 교육활동을 하기 어려웠던 공간, 분야를 개척하는 것일 때는 교육을 더 풍부하게 하는 것이 되지만 대면 교육이 필요하고 가능한 것을 대체하는 수단이 될 때는 질을 떨어뜨리고 교육 격차를 확대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이다. 원격/대면의 문제는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주요한 쟁점 중의 하나로 떠오를 것으로 보이며 교육의 대면적 본질을 지키면서 활용 수단으로 원격 기술을 올바르게 자리매김하는 과정은 발달 중심 교육을 정립하는 과정의 하나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 사회적 돌봄 시스템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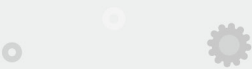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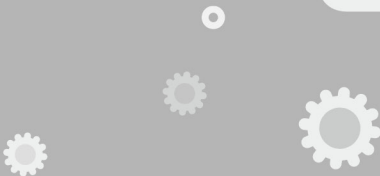
사회적 돌봄 시스템 구축 역시 더이상 미룰 수 없다고 생각된다. 돌봄 기능을 오롯이 개별 양육자에게만 떠맡기지 말고 사회적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것은 돌봄을 통해 어떤 가치를 그 사회가 추구하는 지를 결정하는 과정이다. 영유아기를 중요한 발달의 시기로 보고 발달 시기에 맞는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유아 뿐 아니라 학교교육과정을 축소할 경우 생기는 여유를 사교육비를 들여 학원을 전전하지 않도록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도 동반되어야 한다. 돌봄은 성격 상 학교/교사의 교육활동과 구분되며 또한 학교가 감당할 수 있는 차원의 문제도 아니다. 전사회적 차원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 문제 역시 코로나19 이전부터 상존해 있던 문제이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사회적 돌봄 문제 역시 과제로 제기되면서 제대로 된 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지 정 토 론 I

미래 세대를 준비하는 학교 방역은
사회 방역과 달라야 한다

논산공업고등학교 교사 김 종 림



< 미래 세대를 준비하는 학교 방역은 사회 방역과 달라야 한다 >

논산공업고등학교 김종립

1. 학교 현장에는 코로나 19 방역을 담당할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학교의 코로나 19 방역은 일반 국민들과 달라야 한다. 학생들은 우리나라의 미래이고 앞으로 유행할 감염병 또한 코로나처럼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학교는 학생들로 하여금 자기건강관리 능력을 기르고 다양한 감염병에 대해 이해하고 생활방역을 실천할 수 있도록 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가가 보건교사이다. 그러나 충남 보건교사 배치율은 69%로 전국 배치율 83.9%보다 낮다. 보건교사 미배치교에서는 평상시에도 학생들의 보건교육과 안전문제가 제기되었었는데 코로나 19가 시작되면서 더욱 심각해져 충남교육청은 공여지책으로 2-3개월 단기 인력을 지원하기도 하였으나 언 발에 오줌누기이다.

2020년 2월부터 코로나 관련 업무는 폭주하였고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는 기간에도 예외가 없었다. 코로나 단계가 바뀔 때마다 계획서 작성부터 방역물품 구비, 학교 내 소독, 확진자 발생지역 학생 및 학부모 조사 및 감염병 예방 교육, 교육청과 각지에서 전달되는 방역물품 정리와 배부 등 학교 구성원 중 대신할 인력이 없는 상태에서 보건교사는 홀로 방역업무를 감당할 수밖에 없었다. 전교조충남지부에서 거대학교 2인 배치를 꾸준히 요구한 결과 2020년 충남교육청은 1,500명 이상 6개 학교에 시간제 기간제 보건교사, 시간제도 아니고 기간제도 아닌 인력을 배치하였다. 이에 반해 강원도교육청은 거대학교에 정규직 보건교사 2인 배치를 시작으로 2021년도에는 1000명 이상 17개 학교에 2인 배치, 보조인력인 종일제 건강실무사(800명 이상) 배치, 맞춤형 순회 보건교사(미배치교 보건교육)를 배치한다고 하니 정말 비교가 된다.

충남교육청은 학교 방역과 보건교육을 담당할 전문인력인 보건교사를 모든 학교에 배치하고, 1000명 이상 거대학교에 정규직 보건교사 2인 배치, 1000명 이하 학교에는 보조인력 배치를 하여 코로나 19뿐만 아니라 앞으로 끊임없이 인류를 위협하는 감염병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2. 충남교육청은 코로나 19 효율적 방역을 위해 학교 현장 맞춤형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충남교육청 조직은 감염병을 대응하기에 효율적이지 못한 점이 있다. 강원도교육청의 경우 감염병 업무를 보건장학사가 담당하고 있고, 도교육청은 코로나 19 대응 초기부터 현재까지 각 학교에서 필요한 방역물품을 일괄 구입하여 패키지로 각 학교에 택배로 배부하고 있다. 반면, 충남교육청은 보건 장학사가 있으나 감염병 업무를 담당하지 않으며, 4회에 걸쳐 예산을 배부하여 수없이 많은 방역물품을 일일이 학교 보건교사가 구입하도록 하였다. 더구나 복잡한 양식으로 4회에 걸쳐 정산서 제출을 요구하였고 제각각인 방역물품 단가를 적시하도록 하여 민원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교육청에서 마스크나 손세정제 등을 물품으로 지원할 때도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수령하도록 하여 시정을 요구하였다. 코로나 19 감염병 예방교육과 의심환자 대응에 전념해야 하는 보건교사는 보건실이 창고가 되도록 방역물품을 사고 또 사고, 쌓고 또 쌓고 하느라 쓰러질 지경이다. 충남교육청은 이제부터라도 코로나 19 효율적 방역을 위해 학교 맞춤형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 보건교사가 본연의 업무에 전념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음은 강원도교육청에서 직접 구입해서 각 학교로 배달한 패키지 방역물품 목록이다.

강원도교육청 코로나19 관련 지원 현황

□ 지원현황

- 유·초·중·고·특 감염병 예방물품 지원
 - 보건용(KF80 이상) 마스크 <1,377,621매, 2,292백만원>
 - 열화상 카메라 <292교에 346대, 1,577백만원>
 - 비접촉식 체온계 <4,500개, 353백만원>
 - 손소독제 <50,000개, 353백만원>, 재해구호물품으로 손소독제 26,150개 추가지원
 - 알코올 티슈 <30,000개, 180백만원>, 재해구호물품으로 26,150개 추가지원 예정
 - 학생용 면마스크 <420,000매, 577백만원>
 - 학생 및 교직원 여름용 면(라운) 마스크 <600,000매, 1,200백만원>

강원도 내 초·중·고에 근무하는 보건교사의 95.3%가 코로나 19 대응 강원도교육청의 행·재정적 지원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고 하였다(보도자료). 코로나 19는 진행형이며 그 끝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지금이라도 충남교육청은 조직개편을 통해 전문가인 보건장학사가 감염병 업무를 맡도록 하고 앞으로 다가올 위기에 대응하여야 한다.

보도자료

2020. 7. 22.(수)

강원도보건교과연구회
전교조강원지부보건위원회
(사)보건교육포럼 강원지회

자료문의 : ☎ 엄정임(강원도보건교과연구회 회장) 010-3346-6662

□ 코로나19 대응 강원도교육청 행·재정적 지원 보건교사 만족도 95.3% □

“그러나 전문가 없는 교육지원청과 학교 내 업무 쏠림 현상으로
학교 현장은 여전히 힘들고 불안”

- 강원도 내 초·중·고에 근무하는 보건교사의 95.3%가 코로나19 대응 강원도교육청의 행·재정적 지원에 매우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강원도보건교과연구회와 전교조강원지부보건위원회, (사)보건교육포럼 강원지회가 공동으로 2020. 7. 15(수)~7.17(금)에 실시한 ‘코로나19에 대한 학교 대응 및 보건교사 업무분석에 대한 실태조사’ 설문 결과 강원도 보건교사 총 410명 중 응답자(363명/응답률88.5%)의 95.3%(346명)가 강원도교육청의 행·재정적 지원에 만족하고 있으며, 그 이유로는 업무 담당 부서의 학교 현장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전문적 지원, 활발한 소통 등이 이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교육청은 지난 2019년 조직개편을 통해 생활교육 담당 부서에 배치된 현장경험이 풍부한 보건교사 출신 전문직에게 감염병 예방업무를 담당하도록 한 바 있다.

이로 인해 그동안 심각한 병폐로 여겨졌던 현장과 괴리된 불필요한 행정업무 시달, 과다한 공문서 보고 요구 등이 사라지고, 코로나19 대응 간편 매뉴얼 보급, ‘코로나19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교직원 라이브 방송 연수 실시, 신문광고·현수막 등을 활용한 ‘아프면 등교하지 않아요’ 특별캠페인, 현장지원 TF팀 운영, 코로나19 Q&A 교사 밴드 운영을 통한 소통을 강화하는 등 학교에 직접 도움을 주는 정책을 펼쳐 현장의 보건교사들에게 큰 호응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타시도 교육청과는 달리 품질 좋은 마스크·손 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직접 구매하여 지원함으로써 학교의 행정업무 경감 및 예산 절감 효과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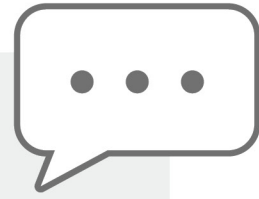
3. 감염병 예방에 힘써야 할 보건교사가 시설관리까지 하느라 삼중고를 겪고 있다.

학생 보건교육과 건강관리를 전담하는 보건교사는 올해 코로나 19로 방역 및 예방교육 관련 업무만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의 업무량이 폭주하였다. 아무리 감염병 관련 업무가 많아도 전문가인 보건교사가 해야 할 일을 일반교사에게 도움을 받는 데는 한계가 있어 보건교사 본연의 업무로 인식하고 최선을 다해 임하고 있다. 그런데도 학교 업무 중 외부업체에 의뢰해서 시설을 관리하는 공기질 관리, 수질검사, 저수조 청소, 정수기 관리, 공기청정기 관리, 학교소독 등을 대부분 보건교사가 담당하고 있다면 누구나 의아해할 것이다. 시설관리를 왜 보건교사가 하나요? 보건교사는 혼자 코로나 대응하기도 힘들 텐데 시설관리까지 하나요?

전교조 충남지부와 보건위원회는 충남교육청에 조직개편 및 업무간소화를 요구하였고 수질검사와 공기질 검사를 교육지원청에서 일괄계약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는 예산절감 효과 뿐만 아니라 행정업무 간소화를 통해 학교현장에 큰 도움이 되었고 추가로 저수조 청소, 학교방역(소독) 등도 2019년 단체협약을 통해 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았다.

이는 강원도교육청처럼 보건장학사가 감염병 업무를 담당하여 학교가 필요로하는 모든 방역물품을 팩키지로 지원하고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교육자료 제공까지 충남교육청은 그 무엇하나 현장의 어려움을 지원하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과 폭증하는 업무량, 거기에 시설업무를 담당해야 하는 삼중고로 보건교사는 하루 하루가 두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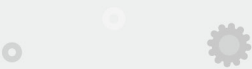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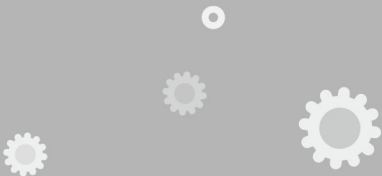
충남교육청은 학교업무 간소화 및 효율적인 코로나 대응을 위해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조직개편 및 저수조 청소, 학교방역 등 시설관리에 대한 일괄계약을 통해 학교를 지원하여야 한다.



지 정 토 론 II

코로나19와 교육급식

은진초등학교 교사 이 영



< 코로나19와 교육급식 >

은진초등학교 교사 이 영

코로나19(COVID-19).

2020년 새해의 뜨거운 소망을 펼치기도 전에 코로나19의 팬데믹 사태로 세계는 충격과 혼란으로 빠져들었다. 코로나가 주는 커다란 충격은 학교도 예외가 될 수 없었고 이제까지의 학교와 교육의 모습을 모두 바꿔놓았다.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학교의 일상과 모습은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모습으로 바뀌었고 교육급식 또한 뒤흔들음을 맞았다. 아이들이 유일하게 마스크를 벗고 있어야 하는 공간인 만큼 방역은 더욱 치밀하게 이루어져야 했고 밀집도를 낮춰야 하니 배식 시간은 위생 규정을 훌쩍 넘길 수밖에 없었다. 예상할 수 없는 순차 등교로 업무의 수정 반복은 계속되었고 식사 지도와 영양·식생활교육 역시 위축되었다. 또한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 기간 중 교직원과 돌봄 학생의 중식 문제는 곧 학교급식으로 불뚝이 튀었고 이에 대한 논란은 이후 여러 차례 학교급식법 개정안 발의로 이어져 학교급식을 흔들었다.

이처럼 감염병 위기 상황은 학교 현장과 교육 급식에 대하여 기존의 질서를 넘어서며 새로운 대응과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감염병 위기 상황을 겪으며 나타났던 학교급식 현장의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또한 코로나 상황 이후의 교육 급식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하여 논의해 보고자 한다.

1. 감염병 위기 상황 중 급식 현장의 문제점

가. 교육 급식 운영 측면

1) 긴급하게 결정되는 순차 등교 방식에 따른 식재료 발주 조정

코로나 발생 현황에 따라 등교 방식 및 급식 인원이 매번 긴급하게 결정되어 급식 식재료에 대하여 수시로 발주를 변동해야 했다. 보통 2주 선발주였던 발주방식이 불과 하루 이틀 만에 변경됨에 따라 식재료를 취소·추가해야 했고 신선 음식 재료 특성상 취소와 반품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지역센터와의 갈등 요소가 되었다. 물량 취소가 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받아놓았다가 냉장고의 용량 부족이나 유통기간 경과로 음식 재료 폐기 등의 손실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른 음식물쓰레기가 늘었으며 아까운 예산이 낭비되었다. 또한 계속 바뀌는 급식 인원수 변동과 맞물려 급식예산 정산방식, 예산지원 변경은 예산 집행을

더욱 어렵게 하였다.

- 현재 등교 방식을 단위학교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어 상황에 맞게 결정하는 장점도 있겠지만 학교별 설문 조사와 협의 등으로 인해 결정이 늦춰지면서 학부모와 학생들도 혼란스럽고 예산 집행과 급식 운영에도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교육청 또는 지원청 단위로 어느 정도의 예산이 가능한 기준을 검토하여 주길 바란다.

2) 방역에 따른 업무증가와 관리의 어려움

식생활 교육실은 학교에서 유일하게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더욱 촘촘한 방역이 필요하다. 많은 학교에 가림막이 설치되었으며 가림막 관리, 개인별 수저 배분, 소독업무 증가, 비대면 검수 등의 업무가 증가하였다. 또한 소규모 학교의 경우 온라인 이후로 모든 수업 일에 전교생 급식을 하고 있지만, 인력지원이 없는 상태에 단축된 조리 시간, 길어진 배식 시간과 방역과 소독업무 등 조리원의 업무강도가 높아져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시차 배식으로 배식 시간이 늘어나 조리 완료 후 배식 시간까지 2시간이 넘어 위생 규정을 넘기는 일이 종종 발생하였으며 이는 특히 기온이 높은 여름철 식중독 발생 위험이 커져 더욱 가슴을 조려야 했다.

- 소규모 학교에 대한 방역 지원 인력을 보완하고 교육지원청에서 한꺼번에 지원해 주어 식생활교육실 방역 관련 업무의 부담을 줄여주었으면 함.

3) 코로나로 간편식 제공? 현실은 어렵없는 소리

위낙 밀집도가 높았던 기존의 급식실의 특성상 밀집도를 낮추기 위하여 시차 배식을 하다 보니 아이들의 식사 시간이 짧아졌고, 방역 기준에 따라 손을 이용한 음식(과일, 쿠키, 찜, 샌드위치 등)을 배제하는 등 등교 개학 초기 간편식단이 제시되었지만 이는 곧 민원으로 돌아왔다. 시간 안에 먹지 못하는 음식은 모두 잔반이 되어 음식물쓰레기의 증가로 이어지며, 짧아진 조리 시간으로 인한 소규모 학교의 급식 노동자들의 업무강도가 증가하고 있다.

: 감염병 위기 단계에 따라 죄의식 없이 1식 3찬 기본에 충실할 수 있는 식단구성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학교급식의 만족도는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지만 만족도가 학교급식의 모든 것을 평가하는 지표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팬데믹 상황에서도 <학교급식 만족도>는 여전히 급식을 평가하는 지표가 되었고 이 부분의 고민과 균형은 현장의 큰 과제로 남아 있다. 넘치는 음식에서 오는 만족감이 아닌 다양한 방면의 보완, 이를테면 급식 장소의 편안함, 신속한 배식과 수요자의 의견반영, 교육을 바탕으로 한 자율성이 보완된다면 또 다른 교육급식의 만족도에서 아이들이 행복과 건강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나. 위축되는 급식 지도와 영양·식생활 교육

1) 급식 시간을 이용한 학생들과의 소통과 급식 지도의 위축

코로나19 방역방침에 따라 급식 시간에 대화를 금지하고 있어서 아이들과 소통하며 자연스러운 입장 지도를 할 수 없게 되었다. 학교급식은 교육 활동이며 무엇보다 아이들과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 나누며 소통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다. 빈 그릇 운동, 급식 우수반 표창 등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관련한 교육 활동의 부재는 즉각적인 음식물쓰레기의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 교육급식은 중요한 기초생활교육이다. ‘교육’의 공백은 급식을 ‘한 끼 식사’에 머무르게 하며 이는 교육의 적시성에 비추어 아이들의 식생활과 건강, 공동체 의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는 향후 교육적 고려와 대응이 요청된다. 무상급식은 건강과 복지를 넘어 교육으로서의 질적 변화를 도모하며 ‘교육급식’이라는 지향점을 두고 긴 시간의 더딘 발걸음을 내디디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는 원칙과 가치를 무너뜨리고 교육급식은 다시 ‘밥 한 끼’가 되어 가고 있다.

2) 영양·식생활 교육의 어려움

영양·식생활교육은 보통 창의적체험활동, 동아리 활동, 교과와의 연계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모든 활동의 체험 위주 수업이 활발히 진행된다.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교육 활동의 위축으로 영양·식생활 교육의 시수 확보는 물론 교육과정의 전반적인 수정이 필요했지만, 원격수업에 관한 기술 부족과 온라인 수업자료의 부족으로 수업을 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에 대한 원격수업에 대한 연수와 온라인 수업자료 및 콘텐츠 제작과 보급이 필요하다.

2. 포스트 코로나 그리고 교육급식

가. 교육급식의 새로운 패러다임 확립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급식은 미래세대 식생활과 식문화 변화에 대비한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 교육급식은 국가의 식량정책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건강한 식생활 실천능력을 길러주며 단순한 식사 제공과는 차별되는 공공적인 가치를 담고 있다. 또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영양·식생활 교육을 통해 미래세대의 건강과 식생활 변화에 따른 대응 능력을 키워주어야 한다. 급식 시간에 가장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던 잔반 남기지 않는 지도는 학생 인권이 강화되면서 직접적인 잔반 관리 지도에서 자발적인 행동 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교육’의 역할로 변화되었고 수요자의 급식 만족도와 건강 면에서의 이상적인 급식을 사이에 두고 균형을 맞추는 일은 늘 현장의 고민거리였다. 육류편향적인 청소년 식습관에 관한 고민은 ‘고른 영양 섭취’를 강조하는 -식상하지만- 중요한 영양·식생활 교육은 학교 현장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여전히 주춤거리고 있다. 이제 교육급식의 정책적 지원과 함께 미래 시민으로서 배려와 절제의 소양이 요구되어야 할 시점이며 환경친화적 교육급식에 대한 역할과 지향점이 제시되어야 한다. 학교급식 만족도의 지표는 ‘음식’에 집중하기보다 공간, 의사소통, 자율성, 교육 서비스 등 좀 더 포괄적으로 전환되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급식 만족도의 불편한 진실에서 벗어나 사회적 합의 안에서 교육을 바탕으로 한 교육급식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나. 공감과 민주적 합의가 반영된 국가재난단계에 따른 교육급식 매뉴얼 마련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 기간 중 교직원과 돌봄 학생의 식사 문제는 곧 학교급식으로 불뚝이 튀었고 이에 대한 논란은 이후 여러 차례 학교급식법 개정안 발의로 이어져 학교급식을 흔들었다. 학교급식은 어느 분야와 같이 학교급식법, 식품위생법, 국민영양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여러 가지 법률적 기준에 따라,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운영된다. 유례가 없던 상황에 모두가 겪어야 할 불편함은 원칙과 가치를 넘어뜨리면서 학교급식으로 향하여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포스트코로나의 모든 분야에서 그렇듯 교육급식 운영 역시 국가 긴급 재난 단계에 따른 매뉴얼이 마련되어야 한다. 무턱 대고 법 개정이 아닌 공감과 민주적 합의 과정을 거쳐 어느 한 직종의 희생을 강요하지 않도록 갈등 요소를 최소화하는 준비과정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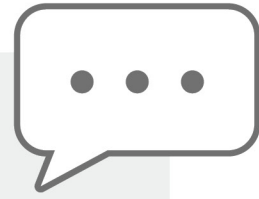
다. 규모별 지원체계 보완 사각지대 없애기

학교 규모별 지원체계에 보완해야 한다. 이번 코로나19 상황에서의 급식 운영에서는 대규모 학교보다 오히려 소규모 학교가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급식운영에 필요하지만, 일정 규모 이하에서는 지원이 어려웠던 워크인 냉장시설이나 냉온 배식대 등의 시설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조리원이 자가 격리되거나, 건강 상태에 이상이 있을 때 현장에서는 대체인력을 구할 수 없어 발을 굴러야 한다. 조리종사원의 제도적 대체인력 풀이 마련되어 인력에 대한 지원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라. 가장 밀집된 공간 ‘식생활 교육실’

학교에서 가장 밀집된 장소 누구나 한 번씩은 머물러야 하는 장소 ‘식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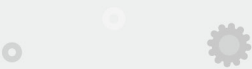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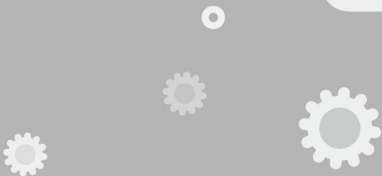
교육실'이다. 하지만 도서관, 영어학습실, 돌봄실, 진로 상담실 등 학교의 다양한 공간 중 어쩌면 가장 딱딱하고 천편일률적인 공간이다. 공간에 대한 어떠한 철학이나 지향점, 안락함은 보이지 않고 그저 위생과 효율성만 보인다.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식사를 해야 하니 그렇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도 특별히 다르지 않다. 공간에 따라 사고방식이 달라지고 태도가 바뀐다. 포스트 코로나의 시대 우리의 밥을 먹는 장소인 급식실 공간에 대하여 다시 고민해 볼 일이다.



지 정 토 론 Ⅲ

코로나 19 초등돌봄의 문제점과 대안

천안차암초등학교 교사 고 차 원



< 코로나 19 초등돌봄의 문제점과 대안 >

천안차암초등학교 고차원

1. 긴급돌봄 운영 사례로 본 초등돌봄의 문제점

● 긴급돌봄의 시작

학교 수업이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되자 돌봄교실이 오전에도 운영되는 긴급돌봄이 실시되었다. 초기에는 맞벌이 및 기존 돌봄을 하였던 학생들이 긴급돌봄을 이용할 수 있었다. 긴급돌봄은 불안했던 학부모들은 조부모에게 아이들의 돌봄을 맡기는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고 긴급돌봄을 신청하면 모두 참여 가능한 형태로 바뀌면서 긴급돌봄 학생이 급증했다. 게다가 방역을 위해 교실 당 학생수를 제한하면서 긴급돌봄교실이 늘어나게 되었다.

긴급돌봄교실 운영을 위해 돌봄교실(전용공간) 뿐 아니라 일반교실, 특별실을 사용하게 되었다. 그리고 오후에만 근무하였던 돌봄전담사가 오전에도 근무하거나 방과후강사를 고용 또는 일반교사가 참여하는 형태로 긴급돌봄교실이 운영되었다. 강사를 구하기 어렵거나 예산 부족의 이유로 교사들이 온라인 수업과 등교수업, 긴급돌봄운영을 동시에 운영하였다. 방역을 위해 한 반을 둘로 나누어 등교 수업을 진행하던 학교 중 긴급돌봄교실 운영이 어렵자 긴급돌봄학생을 등교 수업하는 학생들과 함께 수업하는 사례도 있다.

● 끊어왔던 초등돌봄의 문제점들

2014년 초등돌봄교실이 운영되기 시작한 후 돌봄이 필요한 학생은 빠르게 늘고 있지만 돌봄교실 수는 수요의 10%정도로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2반이었던 돌봄교실이 긴급돌봄교실로 바뀔 때 오히려 6반이 된 것을 보며 실감하게 되었다. 돌봄교실에 당첨되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학원부터 알아봐야하는 것이다. 부모가 아무것도 신청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홀로 집에서 보내게 된다. 아이들은 스마트폰 중독이나 안전사고, 학대로부터 보호 받지 못하게 된다. 지난 온라인 개학기간동안 아이들에게 사건 사고들이 일어난 것은 예견된 일이나 막지 못한 참사이다.

교사들은 그동안 과중한 업무들로 수업권을 침해받아 왔다. 수업 중에 잦은 전화와 긴급 공문으로 자율 학습을 시킨 후 공문을 처리하거나 수업을 연구해야할 방과후 시간에는 각종 공문과 업무로 초과 근무하기도 한다. 그 피해는 학생들이 받게 된다.

그런데 돌봄 확대 이후 돌봄교실이 부족하면 교실을 내주고, 과중한 돌봄 업무까지 맡고 있다. 돌봄업무는 방과후학교와 더불어 가장 기피되는 업무가 되었다. 성과급 기준에 돌봄업무를 맡으면 상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아무도 돌봄 업무를 하지 않으려 한다. 이 사실만으로 돌봄 업무가 얼마나 과중한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긴급 돌봄을 하게 되며 수당을 받기도, 안 받기도 했지만 충남교육청노동조합에서 교사들이 돌봄으로 돈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성명서를 발표하자 교사들이 분노했던 것은 교사 본연의 임무인 교육이 아닌 돌봄을 수업과 병행하여 떠맡고 있는데 비판까지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교사가 오후 돌봄을 맡는 경우도 있었는데, 대부분 교실 안에서 책걸상에 앉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만 운영하였다. 운동장이나 기타 시설은 고학년과 겹쳐 사용하기 어려웠고, 코로나로 인해 더 제한적이다. 딱딱한 교실 바닥과 칠판이 있는 교실은 학생들에게 학교 수업의 연장으로 느끼게 할 뿐, 따뜻한 돌봄의 장소는 되지 못했다. 학생들의 발달이나 성장에 맞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는 문제점도 나타났다.

2. 보편적 돌봄으로 변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장에서 단축근로나 육아시간을 쓸 수 있어야 하고, 각 가정에서 부모가 돌보면 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당첨되어야 하는 초등돌봄이 아닌 방과후에는 대부분 학생들이 안전하고 알찬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변화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 중심의 초등돌봄의 틀을 벗어나야 한다. 온종일 돌봄 특별법이 입법되었지만 이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온종일 돌봄 특별법을 반대하는 것은 민영 위탁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더 이상 학교, 사교육, 기업의 이윤으로 아이들의 돌봄을 미루지 말고 보편적인 돌봄을 국가가 나서 준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 지역 사회가 연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지속 가능한 돌봄 시스템이 만들어지도록 해야 한다.

학교라는 공간이 돌봄 공간의 우선순위가 되었던 것은 학교를 마치고 돌봄 기관까지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생활권인 아파트 내부, 학교 주변 등에 돌봄 시설을 만들어야 한다. 차량 운영이나 하교 도우미 같은 인력 배치를 해도 좋을 것이다.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 계획

공급 목표	소요 재정	확대 계획
현재 33만 명 ▶ 학교돌봄 24만 명 ▶ 마을돌봄 9만 명 ↓ 2022년 53만 명 ▶ 학교돌봄 34만 명 ▶ 마을돌봄 19만 명	총액 1조 1,053억 원 (연평균 2,200억 원) ▶ 학교돌봄(3,500개실) 5,985억 원 ▶ 교실활용(1,500개실) 1,508억 원 ▶ 마을돌봄(1,817개소) 3,560억 원	▶ 2018년 1만6,000명 ▶ 2019년 2만6,000명 ▶ 2020년 3만6,000명 ▶ 2021년 5만1,000명 ▶ 2022년 7만1,000명

자료: 교육부

TBS
구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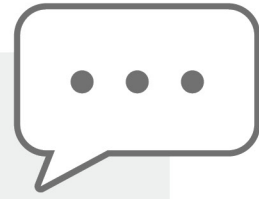
정부가 구상 중인 전국 초등생 '마을 돌봄' 모델

대상 및 시간: 초등생 1~3학년(약 10만 명), 오후 1~7시

특징	정부가 참고한 지방자치단체 모델
공간 아파트 내 주민센터나 노인회관 등 활용	경기 광명시에서 시행한 아파트 내 초등생 '안심돌봄터'
인력 복지 상근자 1명 필수 근무	자원봉사자나 아르바이트가 아닌 지자체가 직접 고용한 복지 담당 직원이 상근하는 서울 노원구 '돌봄 마을학교'
운영 초등생 방과후 돌봄+1, 2개 교육 프로그램 제공	재능기부와 학교 연계로 보육뿐 아니라 교육 프로그램도 다양화한 서울 은평구 '방과후 학교'

자료: 보건복지부

TBS
구독



지 정 토 론Ⅳ

코로나19 이후 교육지원 체계

충남교육청 교육혁신과 장학사 남 기 윤



코로나19 이후 교육지원 체계

충남교육청 교육혁신과 남기운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바이러스 질병으로 인해 국가와 사회, 세계가 맥을 못추고 있다. 이러한 때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학교교육의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갖게 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며, 이 자리가 우리의 교육을 고민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잡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주제 발표해주신 큰 주제 두 가지는 코로나 대응과 코로나 이후의 우리 교육의 방향과 변화로 이해된다.

먼저, 코로나19에 대응하면서 발생하고 있는 안전하지 않은 학교와 교육결손, 격차, 경직된 교육과정과 학사일정운영, 과도한 부담과 업무의 문제는 학교의 현 상황을 세밀하게 살펴주신 말씀이며 제시해 주신 인력 확충과 결손에 대한 교육적 처방, 탄력적 교육과정 운영은 적절한 대응방안이라 생각된다. 이어서 학습집단 규모의 축소, 입시교육에서 발달교육으로 전환, 원격학습, 사회적 돌봄시스템 구축으로 코로나 이후의 과제를 제시해 주셨다.

주제발표에 전반적으로 동의하며,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학교교육의 방향을 위한 대전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 교육의 본질을 추구해야 한다. 학교는 교과교육 뿐만 아니라 생활교육을 포함하는 전인교육을 목표로 해야 한다. 따라서 교과교육은 전인교육을 위하여 발달단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요소인 것이다. 교과교육이 중심이 되어 교육을 바라보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 하고 싶다. 학교는 학생들의 전인 발달을 위한 교육을 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돌봄과 방과후학교도 이러한 대전제하에 대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이번 코로나사태에서 학교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지침 없이는 무얼 하기가 어려웠다. 우선 온라인 수업 같은 경우도 선제적으로 대응한 학교는 다시 교육부 지침으로 바꾸어 진행해야 하는 문제점도 발생했다. 교육부와 도교육청은 거시적 관점에서의 틀을 잡아주고 학교는 학교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야 한다.

코로나 시대 이후의 학교교육의 방향에 대하여 몇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첫째 학교자치역량의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학교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아직 부족한 것이
현 상황이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컨트롤 타워로서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학교에서는 구성원들의 협의를 통해 학교 상황에 맞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학교들만의 특성이 나타나고 그에 따른 교육의 책무성을 느
끼도록 해야 한다.

둘째, 국가 교육과정의 대강화를 통한 학교교육과정 자율화 지원이 필요하다.
자세하고 구체적인 국가 교육과정의 제시는 보편적이고 평균적인 교육과정을
담보할지는 몰라도 학교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지 못한다.
현재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도 교육과정 편성 자율권을 20%로 제한하고 있
는데 촘촘한 교육과정 안에서 20%는 자율적 운영을 하기에 한계가 분명하다.
국가 교육과정의 대강화 속에 도교육청의 지침 역시 크게 제시하고 각급 학교
는 학교의 실정과 지역사회에 맞는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제
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셋째, 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
원격 직무연수와 집합 연수, 학교안팎 전문적학습공동체 지원 등을 통해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교사들 스스로 공부하고 연구할 수 있는
제도적 마련도 중요하다. 현재 14개 교육지원청에서 학교지원센터를 운영 사
례를 보면 선생님들이 필요로 하는 연수 주제를 제시하면 교육지원청에서 강
사 섭외, 연수설계부터 각종 업무 처리까지 일괄 지원하는 사례도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수업이라는 새로운 상황에 직면해서도 학교안팎 전문
적학습공동체로 모여 어려움을 해결해 나간 사례도 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가르친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르치기 위해서 교재연구시
간 필요, 실제로 수업하는 시간, 평가에 따른 결과 처리)를 하고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한 선생님들의 노고를 다시 한 번 생각해 주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고 본다.

넷째, 교육방법의 다양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플립드러닝,
소셜러닝, 액셀러닝, 디자인씽킹 등 자기주도학습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 또한 디지털 기술과 교육의 접목을 강화해야 한다. 학
생들에게 필요한 디지털 기술을 학년별, 학교급별로 제시하고, 교사들도 이러

한 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기 연찬이 필요하다. 또한 교육부, 도교육청에서는 디지털 수업을 위한 제반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규제들을 풀어 주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다양한 종류의 학교를 인정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학교는 너무 획일적이다. 다양한 학교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거리두기가 가능한 소규모학교로의 전학 문의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렇게 소규모학교의 장점을 살린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학교 상황에 맞게 특색있고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들면 학년(군)별 학교도 인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여섯째, 미래교육을 대비하기 위한 블렌디드 교육모델을 제시해야 한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블렌디드 교육 모델을 정립하여 교실 수업 방법을 개선하고 학습자의 학습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일반교실 수업뿐만 아니라 특별교실, 창의적체험활동 수업 등에 블렌디드 수업방법을 도입하고 고교학점화를 대비한 온라인 수업 체계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돌봄과 방과후, 마을교육과 연계한 학교밖 학습체제도 완전하게 구축하여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든 교육받고 돌봄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끝으로 코로나19 이후의 학교교육의 방향은 학생의 입장에서 추진되었으면 한다. 충남교육청의 학생중심 충남교육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학부모의 입장, 선생님의 입장보다 학생의 입장을 더 고려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도민과 함께하는 **소통의정**
현장을 찾아가는 **실천의정**
도민이 더 행복한 **행복의정**